



## 미국 : 아마존의 노조 조직 투표에 대한 이의제기 기각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28 지역(Region 28)의 코넬 오버스트리트 디렉터는 노동위원회 관료들과 노조 활동가들이 노조 조직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아마존 사측의 탄원을 기각했다.<sup>1)</sup> 사측은 노조 활동가들이 창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 찬성표를 던지도록 호도하거나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2022년 9월 NLRB의 변호사는 아마존의 이의제기를 완전 기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사측이 수용할 경우, 아마존은 최초의 아마존 창고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노조와 단체협상을 시작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사측이 워싱턴D.C.에서 열릴 전체 노동위

원회에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체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는데,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마존 노동조합(ALU)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둘로 나누어진 상태이다. 미네소타 사코피 창고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선거를 요구하는 등 노조 조직에 관한 긍정적 신호들이 전국에 존재하지만, 2022년 스테튼 아일랜드와 알바니 인근 창고에서 각각 진행된 투표에서는 꽤 큰 격차로 노조 결성안이 부결되는 등 부정적 결과 또한 나오고 있다.

1) NPR, "Amazon Loses Bid to Overturn Historic Union Win at Staten Island Warehouse", 2023.1.11.

## 미국 : 애플 첫 노조, 단체협상 시작

1월 11일 애플은 기업 최초로 노조를 결성한 소매점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sup>1)</sup> 2022년 6월 메릴랜드 주 타우슨 매장 직원들은 투표를 통해 노조를 조직하고 국제기계항공노조(IAMAW)에 가입한 바 있는데, 2023년 초 공식적으로 애플 경영진과 계약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타우슨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대표 활동가인 데이비드 디마리아는 1월 11일 첫 협상에 앞서 애플 노동자들의 관심

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협상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쟁점은 급여, 노동조건 및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방안 마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넬대학교 리사 리버워츠 노동법 교수는 이번 협상이 타우슨 매장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애플 매장, 나아가 전체 테크산업 노동자에게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의 노조 조직 및 계약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견고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자 간 불평등이 현격히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NLRB에 따르면 노조 조직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지지와 관련해 노동자들을 조사하는가 하면 휴게실에 노조 지지 전단지 붙이는 행위를 선택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협상 역시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리버워츠 교수는 역사적으로 사측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노조의 첫 계약협상은 일반적으로 난항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첫 계약을 비준하는 데에는 평균 46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 CNN, “Apple’s First US Labor Union Reaches New Milestone for Tech Industry”, 2023.1.11.

### 미국 : 아마존 1만 8천 명 정리해고<sup>1)2)</sup>

아마존은 지난 2023년 1월 18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총 1만 8천여 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전망이다.

해당 인원감축은 온라인 판매 성장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식료품이나 B2B 판매, 서드파티 구매자 혹은 헬스케어 부문 고객들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고되는 직원들은 전체 직원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35만 명의 아마존 본사 직원만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이 6%에 달한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메타, 트위터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에서 정리해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대략 만 명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 기업의 정리해고 통계를 수집·정리한 홈페이지(<https://layoffs.fyi>)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1,040개의 기업에서 15만 9,684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2023년에는 229개의 기업에서 6만 8,502명이 해고되었다.

1) Bloomberg, “Amazon Kicks off Round of Job Cuts Affecting 18,000 People”, 2023.1.18.  
2) Los Angeles Times, “Column: How Big Tech is Using Mass Layoffs to Bring Workers to Heel”, 2023.1.30.

## 미국 : 2022년 노조 조직률 역대 최저치<sup>1)</sup>

미국 노조 조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0.1%로 10.3%였던 2021년에 비해 감소했다. 비록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 수는 약 27만 명 정도 증가하여 총 1천4백만 명에 달하지만, 전체 노동인구가 530만 명 증가하면서 비율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 역시 여전하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 노동자 1억 2,035만 명 중 약 720만 명(약 6%)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공공부문 조합원이 약 710만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2,132만 명 중 33.1%인 것

과 대조된다.

한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타이트”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이러한 조건하에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 현상 역시 상승세를 보인다. 실제로 2022년 총 1,353건의 노조 조직 선거가 있었고, 이 중 노동자가 승리하여 노조가 조직된 것은 1,041건이다. 이는 2015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노조 설립 방해, 무노조 일자리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체 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 Wall Street Journal, “Union Membership Rate Hits Record Low Despite Votes at Apple, Amazon, Starbucks”, 2023.1.19.

## 독일 : 통일 이후 최다 노동인구 기록한 2022년, 12월 실업률은 5.4%로 상승

연방통계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sup>1)</sup>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노동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에 많은 해외노동력이 유입되고 국내노동력의 노동참여율이 늘어나면서 세대변화의 영향이 완화될 수 있었다. 고령 노동인구 또한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 노동활동을 한 67세 이상 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1만 5천 명, 2015년보다는 약 20만 명 늘어난 수치이다.<sup>2)</sup>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는 독일의 노동인구 비율이 2023년에 최고 수준에 이른 뒤 2024년에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3)</sup>

한편 연방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실업자 수는 약 245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약 2



만 명, 전년동월대비 약 12만 4천 명이 증가했다.<sup>4)</sup> 또한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5.4%로 나타났다.<sup>5)</sup> 안드레아 날레스 연방노동청장은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실업률이 증가한다며,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체들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기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자는 오히려 약 1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난민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더 낮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sup>6)</sup>

- 1) 연방통계청은 2022년 노동인구를 약 4,560만 명으로 발표했는데, 기록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 약 4,530만 명보다 3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의 노동인구는 2019년까지 14년 연속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36만 2천 명이 감소했고, 2021년에는 다시 약 6만 5천 명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 2) Welt, "Arbeiten mit über 67 wegen Altersarmut? Hier irren die Linken", 2022.12.28.
- 3) Tagesschau, "Rekord bei Zahl der Erwerbstätigen", 2023.1.2.
- 4) 2022년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약 19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0.4%p 감소한 5.3%를 기록했다. 2021년 약 184만 명에 달했던 단축근로 노동자는 약 43만 명으로 감소했다.
- 5)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markt im Dezember", 2023.1.3.
- 6) Tagesschau, "Zahl der Arbeitslosen leicht gestiegen", 2023.1.3.

### 독일 : 12월 물가상승률 8.6%로 하락세 지속, 2023년 물가상승률 평균 7.2% 예상

연방통계청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2022년 독일의 물가는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거듭했는데, 11월 들어 물가상승세가 주춤하며 10월 10.4%에서 10.0%로 감소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독일이 10%대 물가상승률 단계를 확실히 벗어난 지표라고 본다. 2022년 여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과 현재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을 견제하는 요인으로 적절히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코메

르츠뱅크의 요크 크레머 수석연구원은 "12월 물가상승률이 감소한 것은 시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에서 5.1%로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sup>1)</sup>

2023년은 2022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차적 영향을 겪는 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많은 사업체가 2022년에 발생한 전기, 난방 및 주유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기업에서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한 점도 추가적인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 물가상승률 역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며, 연방중앙은행

은 평균 7.2%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sup>2)</sup>

1) Tagesschau, "Inflationsrate sinkt auf 8,6 Prozent", 2023.1.3.

2) Merkur, "Mehrheit erwartet 2023 steigende Inflation", 2022.12.26.

## 영국: 2월 한 달간 대규모 파업 예상 ... 공공부문의 대규모 파업 예고

2023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2월 한 달 동안 교육, 철도, 보건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전방위적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550만 명이 속한 영국노총(TUC)은 2월 1일을 "파업권 보호의 날(protect the right to strike)"로 정하고 대규모 연대파업을 예고했다.<sup>1)</sup> 첫째, 교육부문 노조들도 2월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국교육노조(NEU)는 2월 1일 연대파업 참여를 선언했고 스코틀랜드 최대 교사노조인 스코틀랜드교육협회(EIS)는 2월 28일에 파업을 예고했다. 두 노조 모두 파업을 최대 2023년 4월까지 부분적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2)</sup> 영국 대학노조(UCU)도 2월 1일 연대파업을 예고했고 150개 대학의 7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sup>3)</sup> 둘째, 철도해운노조(RMT) 소속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 역시 2월 1일 연대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2월 1일 연대파업 후 2월 3일에 추가 파업을 예고하여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철도 운행

에 큰 혼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국 전역 124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약 10만 명도 2월 1일 연대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속한 공공서비스노조(PCS)의 노조원들이 연대파업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보건 부문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간호사 노조(RCN)와 구급차 노동자들이 다수 속한 GMB 노조는 2월 6일에 파업을 예고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파업의 여파로 만 건 정도의 수술이 취소되고 5만 건 정도의 외래진료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5)</sup>

2022년 2월 한 달간 예정된 파업으로 공공부문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연금 삭감 반대, 영국 정부의 새로운 파업제한법(Stikes-Minimum Service Levels Bill) 반대 등의 이유로 파업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1) Daily Mail, "It's Walkout Wednesday! February 1 Will See Worst Strikes Chaos Yet as Teachers, Train Drivers, Airport Staff and Civil Servants ALL Walk Out at the Same Time", 2023.1.18.



- 2) BBC, “Teachers to Strike in England and Wales”, 2023.1.17; BBC, “Scottish Teachers Announce 22 More Days of Strikes”, 2023.1.14.
- 3) UCU, “70,000 University Staff to Strike on 1 February”, 2023.1.17.
- 4) Daily Mail, *op. cit.*
- 5) The Guardian, “NHS Strikes Escalate with Same-Day Action by Nurses and Ambulance Staff”, 2023.1.18.

### 영국 : 영국 정부, “파업 제한법” 의회에 상정

2023년 1월 10일 영국 정부는 “파업 제한법”을 영국 의회에 상정했고 영국 하원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다.<sup>1)</sup> 본 법안의 취지는 핵심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이다. 특히 철도, 구급차, 소방 서비스 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여 영국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그래트 샹스 장관은 “노동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최소 서비스 기준 및 의무 범위를 명확히해 파업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혼란과 차질을 막고 영국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하원 의회는 리시 수백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하원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 의회로 법안이 넘어가게 될 경우, 보수당에 다소 호의적이지 않은 상원 의회가 법안 상정을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sup>2)</sup>

해당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영국 노동당은 즉각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많은 노조도 반대 성명을 내었다. 특히 노동당 안젤라 레이너 부대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고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영국노총, 철도해운노조, 간호사 노조 등 여러 노조는 2023년 2월에 예고한 파업 때 법안 반대 시위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UK Parliamentary(2023),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Bill”, <https://bills.parliament.uk/> (2023.1.19).
- 2) BBC, “Strikes Bill: Unions Criticise Plans as Unworkable”, 2023.1.10.



## 프랑스 : 정부, 2023년 60만 개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호 조치<sup>1)</sup>

2023년 1월 6일 브루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의 주요 전력 기업과 회의를 가진 후 1월부터 60만 개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EDF, Engie, TotalEnergies 등 국내 전력 기업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이 평균 메가와트당 280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에너지 위기에 맞서기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요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10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연간 매출액이 200만 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 내 정식 등록된 210만 개의 소규모 기업 중 약 60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정육점이나 제

빵업체 및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요금 보호 조치는 전기공급 계약에만 해당되며, 가스공급의 경우에는 가스비 지원 계획이 기존에 이루어진 바 있어 제외됐다.

이처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력기업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프랑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한 후 전력기업에 송부해야 보장된 요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네스 파니에 튀나셰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기요금 보호정책으로 프랑스의 전기요금이 유럽 국가 기준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1) Le Monde, "Crise énergétique : 600 000 très petites entreprises bénéficieront d'un bouclier tarifaire en 2023, promet Bruno Le Maire", 2023.1.6.

## 프랑스 : 디지털 산업 구인 공고, 지난 4년간 66% 증가

인적자원서비스 기업 란스타드가 OECD와 협력하여 지난 10년간 게시된 4억 1,700만 건의 온라인 구인 공고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0개국은 독일,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로, 이번 연구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빅데

이터를 사용하여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디지털 기술 습득이 노동 전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방법임을 증명했다. 란스타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디지털 직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4년 동안 디지털 산업 내 노동수요가 약 66% 증가했고,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 광고의 7%는 디지털 관련 직업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프랑스는 타 유럽 국가의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를테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2%, 독일은 10%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는 채용 담당자에게 특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개발자와 프로그래머 구인 광고는 전체의 약 67%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 관리자 및 분석가는 전체 구인

광고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업이 적절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캐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구인 광고의 수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40배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4년 동안 수요가 급증한 디지털 기술 목록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목록에는 Ubuntu 운영체제, 자바스크립트 및 CSS 프로그래밍이 게재되었다.

1) Le Figaro, “Emploi : les offres dans le numérique ont augmenté de 66% en 4 ans”, 2022.12.21.

### 프랑스 : 정부, 은퇴연금 개혁 재추진... 법정 은퇴연령 점진적 상향 조정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은퇴연금 개혁 방향과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은퇴연금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sup>1)</sup>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법정 은퇴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62세인 법정 은퇴연령을 2023년 9월 1일부터 3개월씩 늘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64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에 따라 은퇴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연금 납부기간에도 변화를 준다. 지난 2014년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납부기간은 수혜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르면 2035년을 기점으로 1973년생부터 납부기간이 43년으로 늘어난다.<sup>2)</sup> 하지만 이번 은퇴연령 개

혁안에 따르면 43년의 연금 납부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7년으로 조정된다.

그 외에도 노동시장 진입 연령에 따라 법정 은퇴연령에 차등을 둔다. 구체적으로, 16세 이전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은퇴연령이 58세로 적용된다. 16~18세인 경우는 60세, 18~20세인 경우에는 62세가 법정 은퇴연령이 된다.

사회보장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장애를 지닌 노동자의 법정 은퇴연령은 55세로 하고, 산업재해 또는 노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2년 먼저 은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저임금(Smic) 노동자에게는 세후 기준으로 최소 최저임금 85% 수준의 연금을 보장한다.

1) Gouvernement(2023), “Projet pour l’avenir du système de retraites : ce qu’il faut retenir”, <https://>



[www.gouvernement.fr/](http://www.gouvernement.fr/) (2023.1.12).

2) Franceinfo, “Âge de départ, durée de cotisation, régimes spéciaux... Le guide de survie pour comprendre les débats sur la réforme des retraites”, 2023.1.10.

## 프랑스 : 고령자 취업률, 전례 없는 기록에도 유럽연합 평균보다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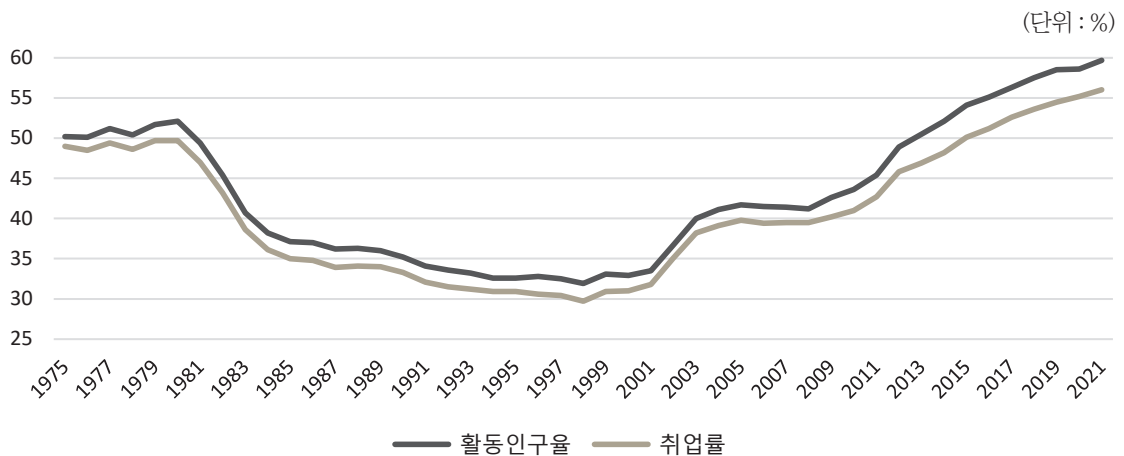
프랑스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에서 2023년 1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프랑스에서 55~64세 취업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sup>1)</sup>

프랑스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보고서는 잇단 은퇴연금 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993년 은퇴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납부기

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했다. 또한 2003년 개혁안은 2008년까지 공무원의 은퇴연금 납부기간도 4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전 영역에서 납부기간을 41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sup>2)</sup> 이처럼 납부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내 노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고령층 취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

<표 1> 1975년 이후 프랑스 고령층취업률과 경제활동인구율



자료: Dares(2023), “Les senior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21 : un taux d’emploi toujours en progression”,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2023.1.15).



유럽연합의 고령층 취업률은 60.5%로 프랑스는 이보다 4.5%p 낮았다. 주변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76.9%), 독일(71.8%), 포르투갈(63.4%)보다

그 수치가 낮으며, 스페인(55.8%), 벨기에(54.5%), 이탈리아(53.4%)보다는 근소하게 앞섰다.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에서는 16번째로 높았다.

- 1) Dares(2023), “Les senior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21 : un taux d’emploi toujours en progression”,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2023.1.15).
- 2) Vie-publique(2018), “Les différences réformes des retraites de 1993 à 2014”, <https://www.vie-publique.fr/> (2023.1.15).

### 스페인 : 거리로 나온 마드리드의 보건 노동자들

2022년 11월 13일 마드리드 주정부의 정책에 맞서 마드리드 보건 노동자들이 “양질의 전면 공공의료”를 기치로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석인원은 주최 측 추산 67만 명, 당국 추산 20만 명으로 2019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sup>1)</sup>

시위의 원인은 보수성향 인민당 출신 이사벨 디아스 아우소 주지사가 이끄는 마드리드 주정부하의 1차 보건의료 인력부족이다. 시위를 주최한 마드리드 의료인노조(AMYTS)는 주정부가 민간부문 사업자를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보건 노동자를 상징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시위에 나선 이들이 내건 구호는 “마드리드는 공공의료를 위해 일어섰다.”였으며, 1차 보건의료를 파괴하는 주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

다. 아울러 주최 측은 “마드리드는 1인당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1차 보건의료에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마드리드에서 열악한 공공의료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마드리드 주정부는 병원과 1차 의료기관의 열악한 인력상황에 대해 비판받았다. 2020년 10월 스페인 의사노조 소속 의료인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당국의 투자부족이 드러났다면 개선 촉구하고자 25년 만에 파업을 단행한 바가 있다.<sup>2)</sup>

이러한 가운데 마드리드 주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부인했으며, 의료노동자의 시위와 파업의 배후에는 2023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좌파정당들이 있다고 일축했다.

- 1) El País, “Así le hemos contado la multitudinaria manifestación por la sanidad pública en Madrid”, 2022.11.13.

2) Tele Madrid, “Primera huelga de médicos en 25 años: ‘El sistema ha hecho aguas durante la pandemia’”, 2020.10.27.

## 스페인 : 2022년 1~11월, 산업재해로 노동자 770명 사망

2023년 1월 16일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는 2022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했다.<sup>1)</sup>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77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6%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형태로 보면 770명 가운데 694명이 임금노동자(전년대비 19% 증가), 76명이 자영업자(전년대비 15.2% 증가)였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58만 4,58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51만 1,940건으로 11.6% 증가했고, 나머지 7만 2,643건은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1년 사이에 5.8% 증

가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심장마비 및 뇌졸중, 교통사고, 끼임 및 절단, 낙상 및 충돌 사고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전년동기대비 53.2% 증가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의 근무일 중 사고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接客업(전년대비 38.8% 증가)과 광산채굴업(전년대비 12.8% 증가)에서도 산업재해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으며, 농·축산업에서만 전년대비 4.6% 줄어 들었다. 발생 건수로 봤을 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8만 5,7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건설업(7만 5,976건)과 보건업(6만 5,561건)이 뒤를 이었다.<sup>2)</sup>

1) 노동사회경제부의 각 연도 산업재해 통계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mites.gob.es/estadisticas/eat/welcome.htm>

2) Diario La Ley, “Los accidentes laborales mortales se disparan un 18,6% hasta noviembre, con 770 fallecidos”, 2023.1.16.

## 일본 : 인력부족 심화 및 법 개정으로 70세 고용보장 기업 27.9%로 증가

후생노동성이 2022년 6월 고령자 고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은 2021년 6월 25.6%에서 2022년 6월 27.9%로 전

년대비 2.3%p 증가했다.<sup>1)</sup> 이 조사는 21인 이상 사업장 약 23만 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70세 고용을 보장하는 비율은 대기업(301인 이



상 사업장) 20.4%, 중소기업(300인 이하 사업장) 28.5%로, 대기업보다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인력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7.9%), 농림어업(37.1%), 의료·복지(35.2%)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산업 내 인력부족 문제와 고령자 고용보장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도입한 제도로는 계속고용(70.6%), 정년연장(25.5%), 정년제 폐지(3.9%)가 있다.

70세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와 함께 중·고령자 고용 관련 법 개정이 꼽힌다.<sup>2)</sup> 일본

은 1971년 「중·고령자 등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행 법률은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 사회 실현”이 목표다. 2021년부터는 기업들이 고용 제도 개선(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나, 고용 외 제도 개선(업무위탁 계약제도 도입, 고령자 취업확보 조치)을 통해 노동자의 70세 고용을 보장하는 “노력”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31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한 60세 이상 상용노동자는 2009년 216만 명에서 2022년 441.7만 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 厚生労働省, 「令和4年「高年齢者雇用状況等報告」の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2022.12.16.  
2) 時事通信, 「70歳就業、対応済み企業3割弱 微増、人手不足など後押し—厚労省」, 2023.1.7.

## 일본 : 유니클로 임금 최대 40% 인상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2023년 3월부터 임금을 최대 40%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sup> 해외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인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은 패스트 리테일링 본사와 유니클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8,400명이 대상이며, 직종이나 직급별로 정하는 “지위” 보상 수준이 기존 10% 미만에서 약 40%로 증가한다. 이번 임금 인상을 통해 신입 사원 초임은 월 25만 5천 엔에서 30만 엔으로 약 18% 증가하며, 입사 1~2년 차 점장 임금은 월 29

만 엔에서 39만 엔으로 약 36% 증가한다. 또한 패스트 리테일링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정규직 사원의 임금 대우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리테일링 홍보 담당자는 이번 임금 개정으로 일본 내 유니클로 인건비 총액이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큰 타격은 아니며 생산성 개선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sup>2)</sup> 2022년 8월에 발표된 패스트 리테일링의 최신 실적은 매출 2조 3,011억 엔, 영업이익 2,973억 엔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

했다.<sup>3)</sup> 따라서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금 인상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패스트 리테일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도 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임금 인상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결정이다.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은 표면적으로 사

내 인재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실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매업을 위주로 나타난 서비스업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sup>4)</sup>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금 인상이 일본 서비스업 내 연쇄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1) 読売新聞, 「ユニクロ、国内従業員の年収を最大4割引き上げ...店長は月収34%増で39万円」, 2023.1.11.
- 2) ロイター, 「ファーストリテ、報酬最大4割引き上げ 3月から」, 2023.1.11.
- 3) 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 「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 2022年8月期 決算サマリー」, 2022.10.13.
- 4) 東洋経済オンライン, 「「初任給30万円」ユニクロ、ジューユー賃上げの意味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報酬大幅アップの衝撃」, 2022.10.12.